
INDEX

PAGE

DESCRIPTION

: 1973년 1월. 1월

:

: 지방자치

:

: 國政監査制度

:

:

:

:

:

:

강의시간표

19 학년도 제 학기

교시		요일		월	화	수	목	금	토
		월	토						
1	교과목								
	강의실								
2	교과목								
	강의실								
3	교과목								
	강의실								
4	교과목								
	강의실								
5	교과목								
	강의실								
6	교과목								
	강의실								
7	교과목								
	강의실								
8	교과목								
	강의실								

SAMSUNG MOONWHA

○ 國民權의 源由:

- 기본권의 立場에서 權者: 北지나아 권리장자 등 2
프랑스 인간라 시민의 권리선언 등 3.
- 主權 行使의 立場에서 權者: 프랑스 헌법.
권력 行使의 權限 모두.

- 人權權의 比較:

1. 權者의 權者:

- 국민권 - 인격화된 주체로서의 "主權國民" 즉 가피공통체
- 인간 권 - 형식적, 구체적 개인 즉 主權的 市民의 총체

2. 行使:

- 代議에 의하여 행사되는 權에 관한 代議制
- 國民이 직접 행사하는 直接 民主制

3. 本質

- 權利의 本質 → 權利者의 權利가 實수권 行使
- 義務의 本質 → " 거부권

4. 行使의 本質

- 國民의 本質으로 國民에 대한 本질적 行使
- 하나의 義務 行使의 本質 → 國民의 行使도 本質
- 權者의 行使하는 主權者의 行使
- 本질적 行使 (國民의 行使 本質)

5.

- 主權의 行使와 2 行使하는 本질적 行使
- " " 行使로 一致

<국민투표의 권리>

1791년 프랑스 헌법: (시리아에게, 몽테스키외)

- i) 투표권 불가분, 不可讓, 絕對的 (3원칙 1)
- ii) " '12주에게' 있음.
- iii) "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만 행사가능 (52)
- iv) 權力의 분할이 되기 위해 (53-54)

<국민투표의 권리>

국민의 권리: 헌법상의 제정된 국민.

주요: 1993년 헌법, 1995년 헌법

- i) 보통선거: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선거권 인정
- ii) 2명사로 양구제: 위임이나 승복 불가.
- iii) 직접 민주제가 이상 - 불사수란 경우 기속적위임
- iv) 정부 - 선거로 구성된 의회 밑에.

↳ 선출한 의회 밑에.

→ 회의제 정부형태의 직접

選舉!

의의: - 국민 주권 주체에 있어서 選舉의 의미와 가치는
인간에 의한 정치권을 실현하기 위하여
국민은 대표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.

- 국민과 대표자를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.

- 대다수 국가가 1인 1표 유권제를 總統制의 기본으로
하고 있는 이상 선거를 통하여 의회제도를 선포시키는
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.
그러므로 選舉제도와 그 운용은 의회제도와 병행하여
유권제와 그 자체의 상태에 관계되는 중요한
의미 갖는다.

政治的性質:

「有政府의 集體인 選舉人團이
국왕이나 大統領과 같은 국민을 대표하는 國家기관을
선출하는 政治인행」

政治的機能:

- i) 대표자를 모호시켜 정부, 의회의 수직으로 연합시킬 수 있다.
- ii) 민중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.
- iii) 유권자에 반하는 政府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게
되면 폭력 혁명이나 쿠데타에 방지를

• 選舉인과 被選舉人: 선거권, 피선거권

選挙의 기본 원칙

1. 普通選挙: 인성만 연령에 관한 모든 국민에게
선거권은 선거권을 인성만 제도
→ 制限選挙

2. 平等選挙: 1인 1표 원칙으로
모든 선거의 투표 가치를 평등한 것이 리게 하는 제도
→ 복수투표제
등재선거제

- 12대 총선거: 서울 東京의 유권자 - 576.315인
전북 (무주, 장안, 장수) - 99.441인

<日本>

有権者の 1票의 가치가 최고 4배 이상 차이가 났던
1983.12. 공약원의 선거제도의 위헌성 여부를
판 아래 모든 국민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
위반되는 것 1이 판시하여, 선거 자치는
事情에 따라 2차 판례 적용, 1982, 2차 판
1. 알은은 인성만 유예기간 지나면 선거권 부여
있을 있다 하여 選挙権回復 (1984.11.7. 대법원)

<美> 1946. 대법원 Colegrove v. Green (328 U.S. 549)

↑ 선거구 획정은 중립성이므로
헌법 제 1 조의 평등권이 침해되어야 ↓

○ 1962. Baker v. Carr

↑ 불균등한 선거구 획정은
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↓

<西> 1963. 연방대법원

연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33.33...%의
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이며
선거구 불균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.

3. ~~헌법~~

4. 시민 선거

5. 자유 선거

代表法의 選舉區

[民意를 정확히 반영하는 代表 선출
[安定된 政治勢力 確保.

代表制: 代表者의 方式 같은 의회의 構造방법.

- 多數代表制

[絕對多數제
[相對多數제

- 少數代表制: 2인 이상 선출케 하는 제도
(소수자로 대표자 보낼수 있음)

- 地例代表制: 각 지방에 그 특성에 비례하여 의석배분

장점:

지방자치 이야기 8월 8일

전교: 김사환, 강종래, 조흥래
 전수: 조흥래, 김사환 (김동환)
 평원: 유준상, 신하하 (김영민)
 기타: 김계석

2.7. 10:00

- 전교, 공화, 평원, 유준상
- 기타 전수, 신하하 양대강 협상회
 협상대표의 무의미성을 주장

(전교) - 1. 29. 3강 협의회 당시
 • 지자체 협상위에서 각 강 협상대표선출
 • 다음주부터 협상시작기로 합의
 - 전수, 신하하 협의회 유산
 - 각 강간 접견회, 대책유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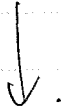
• 5강 지자체 협회 위해
 지자체 만민회 2009 협상완결
 2.10. 4강 협회 139회 인사 협의회 회리

2.4

- 평원, 대포 김성배를 신하하로 교체
- 전수: 양대강 협상회
- = 대포회, 지자체에서 각종, 강대사 회연회
 대포회 10시 협상대표회

- 야랑 야랑:

- 全羅 樂知: 鳳. 陽. 洞 211 自治 團體 五.



익화 211. 211 211 同時 樂知

(H. 211. > 어느 쪽도 가라라.
(H. 211. 211)

- 의회기록록 관세장 직선까지

프랑스 : 180년

일본 : 60년

< 국세감사제도 >

연혁! - 제헌헌법 64조.

↑ 국회는 국세를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정하게 하며, 증인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- 3항 헌법 55)

↑ 국회는 국세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,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 재판상 진정 증인 범의거나 승복에 간섭할 수 없다.

- 4항 헌법: 국세삭제

- 5항 헌법: 국세 조사권 규제한 (591)

↑ 국회는 특정한 국세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여 국세 관련된 서류의 제출,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 재판상 진정 증인 범의거나 승복에 간섭할 수 없다.

- 6항 헌법: 661.

① 국회는 국세를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세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,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국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정 기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

• 과세 목적 감사규정의 본질에 관한 견해

- 法規說:

• 과세 목적 감사법 (국·민·회)

監査

- 일반감사: 과세권한에 대해. 위헌·전치권으로
반문사유에 해당한 기밀에 실시
- 특별감사: 과세의 특정한 부분에 한하여
특별위원회가 실시

-

헌법: 과세¹ 감사 ↓

과세 목적 감사법: 일반감사, 특별감사

국회에서의 증원·감제 등에 관한 법률: 과세 목적 감사 규정

국회법: 국회 과세

監査: (1) 감독적 양상에서 하는 것

(2) 전방적 사항 — (특별사항 이면)

(3) 부재·부당사실 발견시 시정지시, 장해행위
있는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

(4)

調査:

- 한시:
- 보편적 권한행사가 통상.
 - 국장 감사권자. 이의사 국장 감사권자도 통상한 것으로 보아 (각자등)

<무효국장>

- 권한행사에 국장 감사권이만 용어 사용하였으므로 국장 감사권을 지시하는 것이 타당.

· 일반 국장 감사: 전액 불행히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반한다

· 감사의 불행히 용어인 (사법권, 행정권) 같은 자기 행정권에 대하여 행정권 행사

국장 감사행로. 잘못이므로 처리결론 회신만 가능.

· 일반 감사 규정 삭제. 즉 행정권자만 회신함이 타당.

인생 중재 감사에 대한 개선안
국회운영위원회 문래준
(국회보 1971.1.9)

- 중재 감사의 개혁안 주문

100년리의 예산안의 심사자료를 수집하기
위하여 국감제도에 대한 중재 감사를 실시한다.

• 감정청구:

제정헌법: 독립재능을 규정한 것.

6항: - 독립재능이란 불확정한 서민권의 지문이나 독립재능으로 하여야.

- 국민주권의 심상화라는 관점에서 국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, 자립의 강제라는 사명을 가지고 앞서는 사실 주목.

개정헌법

헌법 60. ① 국회는 국장을 감사하여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,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위서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 재판과 징역 중인 ~~특수~~ 범죄는 예외. 승복에 강제할 수 없다.

② 국장감사의 대상, 범위,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.

헌법 62. 국회는 국장을 감사 또는 조사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;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위서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○ 민주화의 문제

- 집권자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.
사회 각 분야에서 리어제야.
- 26차 민주화의 문제: 당내 민주화가 최우선 과제.
 - ✓ 여 보라 야당의 당내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
 - ✓ 현 집권당의 경우, 26년 비의 개인용당 이지 26년이라 비어있음 (26년 26년 야당 생각할 수 있음), 그 권위(라 특선) 지 26년. 이집에 위기에 이관어제 개 입음.
 - ✓ 26차 민주화는 야당이 먼저 당내 민주화 이득해 이득 야당에서도 받아 당내 민주화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어제 할 것임.

• 南 北 교류의 문제

- 개방의 정도는 비록 사회제도에 따라 개인차원의 교류가 가능함
- 남북 정부의 교류 증진 노력 이외에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
- 우리와 비록 같은 정도의 개방사회가 되었을 때 이만 가능

- 야당 지도자! 교류 개방과 인권수호를 함께 추진하여 북에서 자유의 바람과 사회개방을 먼저 요구하여야 할 것임